

# “상용모빌리티 거점 도약”

송하진 도지사, 도내 산단 대개조 선정 관련

“입주기업 대부분 미래형 상용차 산업 연관도 높아 효과 커 기술혁신 등 추진”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익산, 완주, 새만금 산단을 연계한 산업단지 대개조로 전북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가 도내 4개 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24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자동차 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경량화를 위한 전격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속한 산업 여건 변화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단 대개조 사업은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이라는 전북의 비전을 더해 혁신과 성장을 일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산단은 입주기업 대부분이 미래형 상용차 산업과 연관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전자, 뿌리, 에너지, 실증 관



련 분야로 구성돼 대개조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며 “전북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 혁신과 인력양성,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 등 3가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상 산단 4곳은 도내 총 88개 산단 중 임주업체 수의 35%, 생산액 28%, 고용인원 29%를 차지하는 핵심 산단으로서 대개조 사업이 추진되면 질적, 양적 성장과 함께 전북 산업 지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9개 사업에 4,945억원을 투

자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술혁신을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점유 중인 전북의 상용차산업 구조의 30%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수출 비중은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산단 대개조의 비전이 실현되면 매출액은 1조6,000억원, 수출액은 1,000억원이 달성되며, 고용효과도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는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은 코로나19에 지친 도민을 위로하고 전북 대도약을 한 발 앞당길 희망의 길이자 전북의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산업화 과정에서 뒤졌던 전북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견고하고도 믿음직스러운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우리 도는 탄소중립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그린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혁신, 도약을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2월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연달아 추진하게 됐다.

또, 최근에는 국내 수소산업의 최

# “군산 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에도 선정”

민주신영대 의원 “고용환경 개선·경쟁력 제고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24일 전북 산단 대개조 사업이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공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거점산단인 군산·군산2 국가산단과 연계산단인 새만금산단 등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4,9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군산지역 관련 사업은 34건, 4,078억원에

달한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산업단지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산단단지 대개조 사업은 전통 제조업의 체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는 한국GM공장 폐쇄로 촉발된 지역 내 자동차산업 침체와 산단 노후화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차 중심 산업에서 미래차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

적지 제기돼왔다. 이에,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전북 산단 대개조 사업은 주력업종의 구조개편, 사람중심적 고용환경 조성, 노후산단의 친환경·저탄소화를 통해 기존 산단의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기존 국가산단의 고용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군산이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전기차 관련 군산 강소특구 지정과 협업기반 구축사업 예산확보에 이어, 지난해 군산형 일자리 지정과 이번 산단 대개조 지정 결과를 끌어내며, 지역산업 회생을 위한 골격적인 사업 성과를 단기간에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전개공, 노후 주거지 재생 참여를”

최찬욱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24일 “2019년 주택정책조사 결과 전북지역 주택의 60%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며 “단독주택 역시 10집 중 약 8집(79%), 연립주택은 10집 중 7집(68%)이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시 공동화 및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전북개발공사가 전북의 시급한 현안인 도시재생을 전북개발공사의 주요 사업분야로 규정하는 등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고독사 예방책 재정비 시급”

김대오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대오 의원(익산)은 24일 고독사 예방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고독사 방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대상자가 독거노인에만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을 통한 지원보다 민간지원 연계에 초점이 맞춰져 고독사 방지라는 제명이 무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도내 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김대중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이 24일 도내 출자·출연 기관들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지만,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 출연기관 직원들이 1,740명이고, 2021년 예산안 기준 출연금이 845억,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매해 1,000억원 이상이 세금이 출연기관들에 지원되고 있지만, 방만하고 제멋대로인 기관운영으로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출연기관들이 전북도와 협의 없이 스스로 잇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진안군민 100% 광역상수도 보급을”

이한기 도의원



진안군 전 군민이 소외됨 없이 용담댐의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진안군에 100%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진안)은 제 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하루 150만명에 이르는 전북권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13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물을 진안군민들에게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담댐의 남은 용수를 진안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 진안군 전역에 용담댐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잘못된 감염병 예방, 도민건강 위협”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정수)의원이 제 37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부지침에 어긋난 소독방법은 감염병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염소계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을 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사용하는 방법이나 농도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정부가 정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아교육 정책·지원제도 개선을”

박희자 도의원



전북도의회 박희자(비례) 의원은 24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해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정책만 내세우지 말라”면서 “말로만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의 과중한 유치원비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같은 유치원임에도 예산 등 확연한 차이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 “전동킥보드 안전책 마련해야”

진형석 도의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방지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비례)의원은 24일 “관리사각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도민안전보장제도 및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내 폐원 어린이집 대부분 민간형”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비례)이 24일 어린이집의 형태별 격차를 줄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년간 폐장난 등의 이유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중 민간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최 의원은 “과밀지역은 어린이집의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형태의 어린이집 선택에 제한이 있고, 접근성과 시간적 탄력성을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을 찾는다”며 “수요가 있는 한, 운영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김종식 도의원 “새만금 공항 현정부 임기내 반드시 착공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현정부 임기내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의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1단계 사업을 종료한 지금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는 약속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다르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세균 총리가 말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으로 속속 속감 있는 추진 약속에 백만 공감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오늘부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운동 시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원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외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쩔 수 없이,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 위촉식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24일 의정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로 선임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감사위원은 도의원의 정호훈(결산감사 대표위원, 전주1), 이병철(전주), 김정수(익산2) 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10명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24일 의정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로 선임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감사위원은 도의원의 정호훈(결산감사 대표위원, 전주1), 이병철(전주), 김정수(익산2) 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10명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형 자치경찰제 성공 도입 준비 꼼꼼하게

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정책 세미나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박용근)는 24일 ‘전북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근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없이 도민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인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돼야 할 것”이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정착을 위한 전북도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 이후, 최환 대도자치행정과장, 전북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김태형 총경, 박상욱 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이동기 전북연구원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전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례제정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형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목표로 1년간 활동한다. 연구회 회원은 박용근(대표), 성경찬(연구책임), 문승우 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김대중, 김기영, 황의탁, 홍성임 의원이다. /유호상 기자

## 두세훈 도의원,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24일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안마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미안마 군부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쿠데타를 규탄하며, 미안마 민주주의를 조속히 회복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미안마 국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유호상 기자